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Summary in Korean

사회 전체상: 2005 년 OECD 국 사회 지표

국어 개요

경제개발의 국가간 비교는 수시로 경제 측면만을 집중 분석하여 GDP 수준, 1인당 GDP 수준 등의 국내 산출 부문을 검토하는 데에 그쳐 왔다. 물론 이 활용 가능한 경제자원 규모가 국민 생활수준과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광범위한 여타 지표의 폭넓은 도입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사회 개발 수준은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측정이 가능해지며 이어 여러 판이한 국가정부와 사회체제가 가능한 많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전체상**은 사회 지표 일람표를 표기한 격년제 OECD 발간물로 사회 변천의 균등성, 건전성 및 응집력 정도에 관한 양적 실증자료의 수요 증대를 충족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예전 발간 지표는 갱신시켜서, 새로 창안한 지표는 추가로 본고에 삽입하는데 이때에 주관적 복지 수준의 측정 작업은 최초 시도된 경우이다.

OECD 국이 이룩해 낸 사회개발수준과 이 맥락에서 정부나 여타 사회기관이 적용한 계획 정책활동의 영향력, 이 두 가지의 쟁점 분석을 명료히 하도록 일부 지표를 채택하여 본고에 포함시킨다. 활용 가능한 관련 데이터가 제한된 이유로 두 쟁점 모두의 결과 도출이 더 어려워졌지만 둘째 쟁점이 첫째보다 단연코 더 큰 난제로 간주된다. 실업처럼 동시에 정책 목표로도 사용되는 사회개발수준 지표는 조사 방법이 대체로 간단하여 나날의 변화 과정을 수월히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로 국가정책 결과인지를 평가하기는 수월치 않다. 게다가 각 목표 달성에 할애된 자원 규모 또한 감안해야 하며 이어 정책 결과는 정책 집행에 할애된 비용 규모를 정당화시키고 남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간 비교가 바로 이 점 인식에 상당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로, 사회적 지출이 대체로 높은 국가는 사회결과 역시 우월한 성과로 특징되는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국간 비교는 왜 일부국이 타국보다 부진한 결과를 내는지를 설명치는 못하며 해결책 제안 또한 못 한다. 반면 향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드러내어 보여 이 방향으로 정부를 유도시킬 수는 있다.

광범위 영역을 포괄하는 활용 가능 사회지표를 수월히 인식시키도록 본고 **사회 전체상**은 지표를 5 개의 주요 범주로 구분시킨다. 첫째는 **사회정책 무대의 총체**

배경하 일반 여건 지표로, 소득 수준, 인구 구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체로 이들은 적어도 중단기 시점에서는 사회정책의 직접목표로 간주되지 않으나 정책 실효성 측에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예로 총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은 직접 정책목표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정책을 도입하는 여건에서 바로 이 고령자 비중은, 동 정책 실시 과정에서 고령자 생활수준 변천 추이와 수반된 비용 부담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로써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관련 지표: 1인당 국민소득; 연령의존율; 출산율; 외국인 및 외국출생자; 결혼 및 이혼

사회정책의 핵심 목표를 반영토록 채택한 본고 지표는 나머지 4개 범주에 일반 분류화된다: **자급자족력,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각 범주는 두 가지의 주요 지표 유형을 갖춘다: 첫째는 실업, 빈곤 정도의 다양한 개별 정책목표의 변천 경로를 묘사하는 지표 유형으로 '사회 지위' 지표로 구분되어지고, 둘째는 사회 전체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활동을 나열하는 '사회집단 대응' 지표로 분류, 고려된다. 후자는 국가정책의 측에 관한 지표를 해당시키는 동시에 민간부문과 비정부기관의 활동 또한 반영하여 예로 민간연금 개발 정도, 개인·가족 제공의 어린이 및 노인 부양 활동에 관한 지표도 포함시킨다. 대응 지표와 지위 지표 비교를 통해 정책 실효성의 대략 묘사는 가능할 것이다. 하나 사용된 용어 정의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 현실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국 도표의 전면적 국간 비교는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양질의 사회집단 대응 지표는 사회지위 지표보다 더 전무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 공공·민간활동 묘사의 데이터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한편의 민간출처 사회지출에 관한 정보와 또 한편의 각종 사회급여, 고용주 서비스, NGO 서비스를 수급하는 인구 수와 가구 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한 지표가 한 범주 이상을 관련시키는 경우도 다수 있다: 예로, 사회 부조 없이 생계 유지 가능한 인구 비중은 동시에 사회통합, 자급자족력, 보건 차원의 지표로도 쓰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약품 소비는 사회통합 결여 신호인 동시에 보건 취약성 신호로도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런 특성의 지표 전부를 목록으로 작성해 내기 보다는 각 범주의 특정 지표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다른 데서 목록으로 작성된 여타 지표들을 앞뒤 참조하려고 한다.

자급자족력: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자금조달상 근로자 기여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대개 경우 사회급여 수급권은 예전 직장 그리고/혹은 납부 기여금 정도에 기초하여 추산, 지급된다. 근로 활동은 사회 전반에 이익을 가져오는 동시에 개개와 가족 차원에 경제재원, 정체성, 사회상호력, 사회지위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이에 반해 실업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여성 특히 주부의 노동력 참가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는데 이는 국가마다 상이한 사회 여건이 상존하며 주부의 일·가정 양립 도모를 위한 정책방안도 국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한편 장기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국가가 다수 있고 또한 학교에서 일터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수시로 저숙련 노동자에 집산되는 경향이 있어 저숙련자는 실업 상태에 처한다거나 교육 수준이 더 높은 동료보다 저급료에 고용될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실업자 문제에 맞선 사회집단 대응은 실업급여의 현금 제공 정책과 직업훈련제도를 비롯한 정책방안, 두 가지를 혼합시켜 채용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방안이 서투르게 고안될 경우 서로 상충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 예로, 관대한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재정적

동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수급자가 빈곤상태를 피할 정도로 실업급여 수준이 관대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로 초래된 세부담 가중은 노동 수요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사회지위 관련 지표: 취업; 실업; 실업가구; 주부 근로자; 학력수준; 퇴직연령; 비경제활동 젊은층.

사회집단 대응 관련 지표: 실직시 사회급여; 최후 수단으로 사회급여.

형평성: 형평성은 다방면의 영역을 포괄시켜 사회서비스 접근성, 경제 기회, 경제 결과 부문 등에 적용된다. 채용과 기회의 공평한 분배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해 국간에, 일국 시민간에 견해 차가 뚜렷이 드러나는 시점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의 모든 측면의 포괄적 정보 입수가 어렵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며 한편 검토된 지표 대부분이 재정적 격차를 반영한다는 사실 또한 부각된다.

빈곤, 보건의료와 여타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제어, 읽고 쓰는 능력과 학력의 미달 수준, 이들은 강력한 연계성으로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자급자족력에 관련시켜 상기 전술한 고용 지표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다. 더욱이 노동시장 여건으로 말미암아 특정 집단의 형평성 보장이 난해해지는데 이는 특히 실업자 자녀 입장을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고령의 일부층, 특히 사적 연금 수급권을 못 갖는 노인 여성은 빈곤 전략의 위험성을 과도로 안는 바이다.

정책입안자는 사회보장제도를 주 정책도구로 활용하여 형평성 문제 해소에 대응해 왔다. 모든 OECD 국이 사회보장제도를 개발해 왔거나 개발시키는 중이며 이를 통해 사회전체에 걸친 재원 재분배와 각종 우발 사태로부터 개개 보호를 모색하려 한다. 이 취지는 주로 공공출처 사회지출의 형태로 가시화되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이나 세계의 개입으로도 사회급여의 가계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 모든 OECD 국에서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이 퇴직 소득 급여에 소용되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절에서는 고령자 연금 현황과 현행 연금 규정에 입각한 미래 퇴직자의 기대 퇴직소득 동향에 관한 지표를 소개토록 한다.

사회지위 관련 지표: 빈곤; 소득 격차; 아동 빈곤; 고령층 소득.

사회집단 대응 관련 지표: 공공출처 사회지출; 민간출처 사회지출; 총사회지출비; 고령층 연금 현황; 기대 연금 소득.

보건: 사회여건과 보건상태는 강력한 연관성을 갖는다. 실로, 보건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의학의 부단한 진전으로 시현된 생활수준 향상은 또한 건강 상태를 현격히 개선시키는 데 아무쪼록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보건상태 격차는 여전히 상당폭을 유지하고 일부 빈곤국가는 계속적으로 더 악화된 보건 상태를 기록해 마지않는다. 게다가 가장 사회불이익 계층 중 빈곤층, 저학력층, 실업자는 최악 상태까지 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국민 보건 지표가 향상세를 보인다 하여도 일부 계층의 보건 여건은 향상의 조짐조차 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정부 대응책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으나, 의료기관내 장기 치료나 공공 지원의 재가 서비스를 받는 고령층 비중과 총 보건의료비 지출 규모는 가능한

측정토록 한다. 그러나 이 때도, 보건 여건 문제점을 실업이나 부적절한 주거 시설 같은 여타 사회여건과 분리시켜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수월치 않다.

사회지위 관련 지표: 평균 수명; 보건 여건에 맞춘 평균수명; 영아 사망률

사회집단 대응 관련 지표: 총 보건의료비 지출; 장기 치료.

사회통합: 다수의 OECD 국 사회정책 핵심 목표는 사회통합과 사회소외 퇴치의 동시 구현이다. 그러나 사회통합과 사회소외는 공통으로 인정된 정의를 갖추지 못하여 적정 지표의 확인 작업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 한편, 시민의 사회 참가 정도와 이들이 일상 활동에 얻는 만족도에 관한 지표를 검토하는 것도 접근방법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때, 외부 사람과의 접촉 빈도, 특정 집단 및 협회에 소속 여부, 이 두 사항이 접근방식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 아울러 주관 설문 데이터 역시 개개의 복지수준과 사회전체 통합정도의 '직접적' 측정 잣대로써 긴요히 활용된다. 이 지표는 본고 *사회 전체상*에 최초 반영하는 바이다.

자살 비율과 약품 소비 및 관련 원인의 사망 모두는 개인 차원의 파멸 뿐 아니라 사회소외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0 대 출산모 증가 현상이 보여주듯 자격증 없이 교육제도를 떠나 수시로 노동시장 진입에 장애를 겪는 10 대 미혼녀와 이들 자녀는 사회소외, 사회빈곤의 악영향을 받게 될 위험성 또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응책 관련 지표의 확인 작업은 훨씬 더 난해하다. 사실상, 사회소외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특정 고안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역으로 사회정책 중 자급자족력, 형평성, 보건의 여타 측면을 관련시킨 정책은 모두가 사회통합 진전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지위 관련 지표: 주관적 복지수준; 사회고립; 집단 소속감; 10 대 출산모; 마약 복용 및 관련 사망 건수; 자살

© OECD 2005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